



해양부 정부차원의 동북아 물류협력 본격 추진

한·중·일 3국 국제물류 장관회의 구성 합의

동북아시아의 물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협의가 구가 될 '한·중·일 국제물류 장관회의'가 내년에 구성된다.

오거돈 해양수산부장은 10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교통부 장춘시엔(張春賢) 부장과 회의를 갖고 동북아에서의 협력적 물류관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'한·중·일 국제물류 장관회의'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. 동 회의는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구성되고, 하반기에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.

한·중·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이미 세계전체 경제규모의 20%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울러 3국간 역내 교역도 4,400억달러로 10년 전에 비교하여 5배가 증가됨에 따라 이 지역의 물동량이 전세계의 30%에 육박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었다.

한편, 일본과는 지난 7월13일 키타가와(北側) 국토교통성 대신과의 회의를 통해 이미 장관회의의 구성에 합의한 바 있으며, 한·중·일 3국간의 정치적 관계가 미묘한 시점에서 3국이 협력관계를 설정한 만큼,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관계개선 및 공동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동 장관회의에서는 해운·항만·항공 등 기존 물류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, 표준화된 국제물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상호간

의 정보 공유 및 활용 등 동북아지역의 물류협력 문제를 다루게 된다.

구체적인 협력과제로서, 첫째 3국의 대표적 물류관련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물류협력의 장애요인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고, 둘째 필요시 서로의 항만을 자국의 항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항만시설의 개발에 교차투자를 추진하고, 셋째 세계 물동량의 30%를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육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.

앞으로 동 장관회의가 활성화된 후에는 러시아를 이에 포함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IAPH(국제항만협회) 총회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고, 다음달 열리는 IMO(국제해사기구)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A그룹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데 서로를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.

한편, 이날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'한·중 국제물류 포럼'에는 중국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물류관계자 및 한국 기업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하여, 동북아시아의 물류협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. 이날 포럼에는 오 해양부장관과 중국 교통부장이 함께 참석하여 동북아 물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였다.